

북한의 의도는 성공할 수 있을까?

최진욱

북한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이명박 대통령의 당선이후 침묵하여 오던 북한이 최근 빠른 속도로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그동안 북한은 신년사에서 10.4선언의 철저한 이행을 촉구하고 대통령 취임식에 축하사절의 파견을 검토하는 등 이명박 정부에 유화 제스처를 보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한국정부가 3월 3일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북한에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것을 계기로 북한이 반발하기 시작했고, 이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등 행동에 들어가기 시작하였다.

키 리졸브 한미 합동군사훈련(3월 2일-7일)을 하루 앞두고 서해상에서 300여발의 포사격을 가했으며 인민군 판문점 대표부는 3월 13일 “오랫동안 비싸게 마련해 놓은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3월 27일에는 “북핵 문제가 타결 안되면 개성공단을 확대하기 어렵다”는 김하중 통일부 장관의 발언을 문제 삼아 개성공단내 남북경협협회사무소 정부요원 전원을 철수시켰다.

3월 28일에는 서해상에서 단거리 함대함 미사일 3기를 발사하기도 하였다. 한·미 외무장관회담에서 양국 장관이 3월 27일 “북한의 핵신고에 대한 인내심이 다해가고 있다”는 경고성 발언이 나온 직후였다. 미사일 발사 직후 외무성 대변인은 농축우라늄 프로그램과 시리아 커넥션을 부인하면서 불능화도 무산될 수 있음을 경고하였다.

북한의 행동은 3월 29일 최고 수위에 달하였다. 남북장성급군사회담 북측 대표단 단장은 3월 2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의 핵공격시 대책에 관한 김태영 합참의장의 발언을 ‘선제타격’으로 해석해 취소와 사과를 요구하였으며, 실행되지 않을 경우 모든 대화와 접촉을 중단할 것임을 선언하였다. 30일에는 북한 조선중앙통신의 군사논평원 논평을 통해 ‘젯더미’ 극언을 하였다.

북한의 일련의 행동은 한반도 상황이 북한의 기대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는 데 대한 북한식 반응이라고 볼 수 있다. 북한의 최대관심사는 악화일로에 있는 체제안정이며, 이를 위해 북미관계의 개선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노력해왔다. 아울러 남북관계 개선을 병행추진함으로써 북·미관계 개선에 박차를 가하려는 것이 지난 2.13합의 이후 북한의 전략이었다. 북한은 지난 10월 레임덕 정부와의 남북정상회담을 수용함으로써 남북경협의 틀과 내용을 확정하고, 이명박 정부에서 승계되기를 희망하였다.

즉, 최근 북한의 행동은 남북관계를 끝장내겠다는 것이 아니라 ‘잘해보자’는 것이다. 다만, 이명박 정부가 기존 남북관계의 틀을 벗어나려는 것에 대하여 북한은 변할 것이 없으니 기존 방식대로 하자는 것이다. 더욱이 농축우라늄 프로그램과 시리아 핵기술이전 등 핵신고를 둘러싼 북미간 합의가 난관에 부딪치자 4월 18-19일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 양국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당국간 합의사항

을 준수해야 한다는 명분을 갖고, ‘호혜적 남북관계’를 요구하는 남한에 6.15정신과 10.4합의의 승계를 요구하고 있다. 즉 ‘공은 북측에 있다’는 남측의 메시지에 대하여 ‘공은 남측에 있다’고 버티기를 하는 모습이다.

북한의 이러한 반응은 사실 어느 정도 예견된 것이며, 북한의 버티기에는 나름대로의 계산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남북간 검색국면이 장기화되면 남한내 진보세력들이 정부를 압박하고 남남갈등이 일어나 이명박 정부가 궁지에 처할 것이라는 계산이다. 이를 위해 북한은 최대한 절제된 행동을 통해 남한내 여론의 지지를 사고 이명박 정부를 압박하려고 하고 있다. 북한이 포사격시 북방한계선을 넘지 않은 것이나 미사일 발사시 그 방향을 북측으로 한 것 등은 절제된 행동의 예이다. 개성공단 철수대상을 당국요원으로 국한하고, ‘군사분계선 통과와 전면 차단’조치도 당국자만 대상으로 하는 등 당국·비당국을 분리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둘째, 경제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 이명박 정부에게 군사적 긴장은 치명적인 악재이다. 북한은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킴으로써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을지도 모른다. 셋째, 올림픽을 앞두고 있는 중국이 한반도 정세의 불안정을 우려하고 있으며, 북한에 대한 정치적 경제적 지지를 할 것이라고 믿을 것이다. 더욱이 티베트 사태로 인해 한반도안정을 더욱 절실하게 되었다.

북한이 나름대로의 계산에 의해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는 있지만 북한은 그만큼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남한의 식량 및 비료지원이 성사되지 않으면 당장 북한은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되며 6자 회담의 교착으로 이에 대한 대안을 찾기도 쉽지 않다. 악화되고 있는 사회불안을 생각하면 남북관계의 진전이 더욱 아쉬울 수 밖에 없다.

북한은 지난 10년간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의 경험과 지원에 익숙해졌으며, 새로운 차원의 남북관계를 구상하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의구심과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결코 북한을 압박하거나 고립시키는 정책이 아니다.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분명히 밝혔듯이 이명박 정부는 남북간에 진행되고 있는 경제협력 사업들을 지속하고 인도적 대북지원도 계속할 것을 천명하였다. 다만 남북관계가 진정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호혜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핵문제가 해결되고 북한이 개방되어야만 대규모의 남북경협이 가능하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이다. 사실 민간기업과 국제사회의 참여없는 남북경협의 발전은 한계가 있으며, 본격적인 남북경협을 위한 최소한의 환경이 북한의 개방과 비핵화이다. 물론 이마저도 북한의 의지만 확인된다면 추진과정에서 얼마든지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설명하고 불필요한 긴장을 방지하기 위해 당국간 대화 뿐만 아니라 비당국 차원과 국제사회의 다양한 채널을 통해 북한과 대화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우리 내부에서도 정부의 새로운 대북정책 방향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력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최근 북한의 긴장고조에 정부가 차분하게 대응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정부가 의도하지 않은 불필요한 긴장을 조성하지 않으려는 것이다.

이번 사태는 남북관계를 한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진통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새로운 환경에 과거의 방식대로 의사표시를 하고 있으나, 진통이 지나쳐 지난 시기의 성과마저 송두리째 유산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당분간 당국간 대화가 어렵더라도 민간차원의 대화와 교류는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도 진정한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과거 70년대 재일동포들의 투자, 80년대 합영법, 90년대 라진·선봉, 2002년의 경제관리개선조치가 왜 성과를 보지 못했는지 차분히 생각할 필요가 있다.

